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대에서 현실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착공·2029년 입주 목표광역시 대중교통 확충·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등 도시 기반 구축

2026.05.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부처별 뉴스 이동



국민주권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년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출발점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 행정수도 공간적·제도적 기반 마련 본격화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행정수도 핵심공간 밑그림을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는 국가상징구역의 시설 배치와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도시계획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여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복도시 전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국가상징구역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도 본궤도에 올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1월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27년 8월 착공과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 부지조성 등 건립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1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를 실시하고, 5월 당선작을 선정·발표했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주변 도시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행복청도 관계부처와 함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등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가상징구역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기반 강화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성장기반 강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광역교통망 재편을 위해 올해 1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기반도 한층 넓어졌다. 지난해 10월 반석~구암 BRT 1단계 개통과 B2노선 연장 운영을 통해 대전과 행복도시를 잇는 광역 대중교통망이 확장됐다.

행복도시권 BRT 연간 이용객도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광역 대중교통이 행정수도권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올해 3월 충남대 의대 개교로 서울대, KDI, 충북대, 한밭대가 참여하는 1단계 임대형 캠퍼스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공주대와 충남대 분양형 캠퍼스가 착공되면서 2단계 조성도 본격화됐다.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미래 성장동력 공간으로 생활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근에 혁신대학·기업 연계공간 복합캠퍼스도 조성 추진 중이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속 성장하는 행정수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족기능 유치와 도시인프라 확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1년은 행정수도 세종이 구체적 공간과 제도로 가시화된 시간이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에 걸맞은 도시 기반을 함께 확충해 행복도시를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044-200-3060)

인쇄하기

닫기